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 윤 대통령 취임사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회 앞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반지성주의, 민주주의의 위기 불러  
자유 가치 정확하게 인식·재발견  
북핵 해결 대화 문 열어 놓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민으로 연대해 돕고, 모두가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 갈등 문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문제를 도와와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와와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력을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단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 보장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유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과학기술과 혁신으로 성장을 이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도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룡의 위기가 반지성주의가 부른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장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률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며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다수의 힘으로 상대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확신한다”며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자유” 가치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보편적 가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에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며 “자유는 보편적 가치로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돼야 하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걸 방지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시민의 연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며 “모든 세계시민이 자유시

계묘년(癸卯年)에는  
**완주**  
사랑

고양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  
※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시+기초) 기부 제외

기부하신 분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한도액  
연간 연간 500만원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은 기부액 30% 범위 내로 최고 100만 원까지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 한덕수 임명 동의안 ‘尹 1호 결재’

〈국무총리 후보자〉

취임 직후 집무실서... 대야 압박 차원  
인사청문회 통과 7명 장관임명도 서명  
한동훈 등 임명시 정국 경색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에 서명했다.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장관 제청권이 있는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인준 지연 전략으로 내각 출범이 가로막혀 있어서다. 국회 분회의를 열어 서둘러 한 총리에 대한 인준을 해달라는 일종의 대야 압박성 조치다.

민주당이 한 총리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실상 인준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1호 안건으로 결재한 것은 한 후보자를 초대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김부겸 현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면 추 부총리를 통해 다른 임명 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 임명 동의안에 서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7명의 장관에 대한 임명에도 서명했다. 이는 지난 9일 15개 행정 각 부 차관급 20명에 대한 인선의 연장선이다. 차관으로라도 정부 조직을 채우는 한편,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이 신속하게 업무를 시작하게 해 정부 운영을 서두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앞서 김부겸 총리는 이날 추 경제 부총리와 인사청문회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과거(이종호), 국방부(이종섭), 환경부(한화진), 고용부(이정

식), 농식품부(정황근), 해수부(조승환)를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 결재가 이뤄짐으로써 7개 부처 수장들의 임기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한동훈 법무 원 회롱 국토교통,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이상민 행정안전부 등 민주당이 부적격으로 판정한 장관 후보자들에게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빠 찬스’ 논란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에 흠집을 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국회의원이 강제강대치 국면을 역이용해 민주당을 ‘국정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으로 활용하고, 여론이 재방선거에서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점을 윤 대통령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